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해양연구본부	성명	박영길	직급	부연구위원
	소속	해양연구본부	성명	민영훈	직급	전문연구원
	소속	해양연구본부	성명	정현욱	직급	전문연구원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제행사 주최 <input type="checkbox"/> 국제행사 참가 <input type="checkbox"/>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input type="checkbox"/> 세미나, 교육, 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					
관련사업 (예산항목)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운영					
출장기간	2022. 12. 7.(수) ~ 2022. 12. 10.(토) (2박 4일)			출장지	미국(보스턴)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12.7	-	출국 및 이동			KE 091(인천-보스턴) 09:30→09:00
	12.7	보스턴	○ (오후) 회의 준비 및 환영 만찬			-
	12.8	보스턴	○ (오전) 회의 준비 ○ (오후) KMI-하버드대 벨퍼센터 컨퍼런스 개최			-
	12.9~10	-	입국 및 이동			KE 092(보스턴-인천) 11:55→17:45 (+1일)
출장성과	○ 출장목적 달성 정도(출장 계획 대비) - 당초 계획된 출장 목적을 전문가의 심도 있는 토의 및 토론을 통해 달성함 - 출장 목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및 중국의 부상과 대만 갈등의 동아시아-해양안보에 대한 합의 검토 ○ 주요 성과 - 동아시아 및 한국에 중대한 합의가 있는 대만해협 위기의 영향,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토의를 통해 문제의 본질 파악 - 국제정치-안보 분야 세계적 싱크탱크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와 KMI의 협력 관계 강화 및 신뢰구축 제고 - 한·미 전문가들의 학술적 교류협력 기회 제공 및 관련 사안에 대한 양국 전문가들의 이해 증진					
향후계획	○ 출장 성과 공유 계획 - 해양전략 및 안보 관련 원내 과제에 KMI-하버드 벨퍼센터 공동 컨퍼런스의 전문가 토의 및 토론 내용 반영 예정 ○ 정책화 등 활용 계획 - 결과보고서 작성하여 관련 정부 기관 공유 예정					
참고 등 특이사항 (건의사항)	없음					

* 주요업무 수행 결과 별지 작성 후 첨부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유형	<input type="checkbox"/>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제행사 주최 <input type="checkbox"/> 국제행사 참가 <input type="checkbox"/>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input type="checkbox"/> 세미나, 교육, 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
업무①	KMI-하버드대 벨퍼센터 컨퍼런스 공동 개최
수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참석자 : 유기준 보스턴 총영사 등 총20여명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MI : 원장님, 한기원 실장, 박영길 실장, 민영훈 박사, 정현욱 박사 - 한국측: 유기준 보스턴 총영사,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김기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홍순복 보스턴 부총영사, 김원중 영사, 이기호 영사, 김효성 전문관, 심다솔 외무사무관, 최두원 외무사무관 등 - 미국측: John Park 벨퍼센터 교수, Alex O'Neil 벨퍼센터 Coordinator, Scott A. Snyder 미외교협회(CFR) Senior Fellow, Maria Adele Carrai 뉴욕대(상하이) 교수, Yun Sun 스티븐슨센터 Senior Fellow 등 ▣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주제 : 중국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긴장관계가 동아시아 해양안보에 미치는 영향 - 1세션 (좌장 : 박영길, KMI 실장) : 대만 위기가 동아시아 해안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1 (김기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대만해협 위기 발생이 해상교통로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에 대한 함의를 발표 · 발표 2 (Yun Sun, 스티븐슨센터 Senior Fellow) :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정책변화, 대만해협의 중요성, 대만해협 위기 발생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 대만에 대한 향후 중국의 대응방안 등을 중심으로 발표 · 지정토론 1 (Maria Adele Carrai, 뉴욕대(상하이) 교수) : 대만 통일을 위해 중국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정책적, 강제적 수단에 대해 질의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대만해협 위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 질의 · 지정토론 2 (정현욱, KMI 전문연구원) : 최근 펠로시 의장 대만 방문 등으로 대만해협 긴장 고조와 관련하여 한 · 중간 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중국의 북한 영향력 축소와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 질의 - 2세션 (좌장 : Alex O'Neil, 벨퍼센터 Coordinator) :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1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 한국의 전략정책 전망과 외교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최근 발표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현재 미국과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향후 한국의 전략정책의 도전과제를 발표 · 발표 2 (Scott Snyder, 미외교협회 Senior Fellow) : 한국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비교 · 분석하여, 향후 두 전략의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을 통한 대중국 견제정책과 아세안과의 협력 중요성을 발표 · 지정토론 1 (민영훈, KMI 전문연구원) : 한국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특히 두 전략의 주요 동인이 북핵과 중국이라는 서로 다른 목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에 착안 향후 두 전략의 마찰 또는 충돌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 질의 · 지정토론 2 (John park, 벨퍼센터 코리아 프로젝트 책임) : 미 · 일 동맹과 한 · 미 동맹의 방향성을 비교하고 이들 동맹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하고, 한국이 중국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일치된 통념이 있는지 문의하고, 중국의 대한민국 경제책략으로서 경제 보복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의 대응능력에 대해 전문가 의견 질의
수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 및 한국에 중대한 함의가 있는 두 문제(대만해협 위기의 영향,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문제의 본질 파악 ▣ 국제정치-안보 분야 세계적 싱크탱크인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벨퍼센터와 KMI의 협력관계 강화 및 신뢰구축 제고 ▣ 한 · 미 전문가들의 학술적 교류협력 기회 제공 ▣ 관련 사안에 대한 양국 전문가들의 이해증진 <p>※ 상세 내용 결과보고서 참조 (첨부)</p>

* 주요 업무 내용을 10개 내외로 작성

* 업무별 수행 결과는 각 700자 이내로 작성(관련 사진, 도표 필요시 추가)

* 보고서 총 분량은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필요시 조정)

[첨부]

2022 KMI-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 컨퍼런스 공동개최 결과보고

2022. 12. 21.(수) 해양연구본부 독도·해양법연구실

1. 회의개요

- 주제: 중국의 부상 및 우-러 전쟁의 동아시아 해양안보에 대한 합의
- 일시: 2022년 12월 8일(목)
- 장소: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 Weil Town Hall
- 주관: KMI,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 (Korea Project)
- 후원: 주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Faculty of Arts and Sciences' Korea Institute at Harvard University

2. 개최목적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및 중국의 부상과 대만 갈등의 동아시아 해양안보에 대한 합의를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해양안보 정책·전략 연구에 활용

3. 주요일정 (※ 일정은 미국 현지시간 기준)

일정		주요내용
12.7.(수)	17:30-19:00	저녁 리셉션 (유기준 주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 주재)
개회식		
12.8.(목)	9:30-9:35	등록
	10:00-10:15	환영사 : John Park (하버드 벨퍼센터, 코리아 프로젝트 책임) 개회사 : 김종덕 (KMI 원장) 축 사 : 유기준 (주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
대만 긴장이 해상무역에 미치는 영향		
12.8.(목)	10:15-12:00	좌장 : 박영길 (KMI 독도·해양법연구실 실장) 발표 1 : 김기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2 : Yun Sun (스팀슨센터, Senior Fellow and Co-Director of the East Asia Program, Director of the China Program) 토론 1 : Maria Adele Carrai (뉴욕주립대(상하이) 교수) 토론 2 : 정현욱 (KMI 독도·해양법연구실 전문연구원) 종합토론 세션폐회 : John Park (하버드 벨퍼센터, 코리아 프로젝트 책임)

일정		주요내용
12.8.(목)	12:00-14:00	점심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역할		
12.8.(목)	14:00-16:00	<p>좌장 : Alex O'Neill (하버드 벨퍼센터, Korea Project, Coordinator)</p> <p>발표 1 :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p> <p>발표 2 : Scott Snyder (미외교협회(CFR), Senior Fellow for Korea Studies and Director of the Program on US-Korea Policy)</p> <p>토론 1 : 민영훈 (KMI 독도·해양법연구실 전문연구원)</p> <p>토론 2 : John Park (하버드 벨퍼센터, 코리아 프로젝트 책임)</p> <p>종합토론</p> <p>세션폐회 : 박영길 (KMI 독도·해양법연구실 실장)</p>

4. 주요내용

□ 1세션 : 대만 긴장이 해상무역에 미치는 영향 (좌장 : 박영길, KMI 실장)

○ 발표 1 : 김기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과거 대만해협 위기는 총 세 차례 발생하였으며, 올해 8월 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인해 대만해협 위기가 다시 고조
- 미·중 군사력 균형 변화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국의 군사적 충돌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인데, 현재는 미국이 대중국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양국간 격차가 좁혀질수록 대만해협에서 미중 충돌 가능성이 상승하며, 해당 분쟁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고 국제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큼
- 한국은 대만해협 위기 발생 시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면 주한미군 자산의 동원 및 한국군의 직·간접적 연루 가능성이 있을 것을 우려함
- 대만해협 유사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력의 대만해협에 집중되면 북한이 미국의 대한반도 방위 공약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약화로 오인하고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음
- 대만해협의 위치는 한국의 4개 해상교통로 중 물동량이 많은 남방항로상에 있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 또한 매우 큼
- 전 세계 컨테이너선의 50% 이상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며 한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생산된 반도체와 각종 전자 장비를 나르는 항로이므로 대만해협 봉쇄 시 글로벌 물류 지연 악화

○ 발표 2 : Yun Sun (스팀슨센터, Senior Fellow and Co-Director of the East Asia Program, Director of the China Program)

- 대만에 대한 중국 정책의 발전
 - 대만은 1949년 국공내전 이후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이주하여 대만정부를 수립하고 현재까지 자체 헌법 및 정치 체계를 수립하여 체제 유지
 -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최근까지 “하나의 중국”원칙을 고수하고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 중국 및 대만의 평화 통일과 최근 양안관계 변화
 - 과거 시진핑은 양안관계의 평화로운 발전과 경제·문화 교류 협력 확대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양안관계는 미·중간 일련의 사건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 대만해협 및 말라카해협의 중요성
 - 대만해협과 말라카해협은 동북아시아 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어서도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으로, 특히 중국 대도시의 대부분이 대만해협과 말라카해협을 통해 수송되는 에너지에 의존
- 대만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 정책 대응
 - 미국에게 인도양은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강압적 정책이 서아시아로 팽창하는 것을 견제하는 중요한 지역
- 중국의 대만에 대한 강제적 수단 동원과 관련하여 일본은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나 한국의 입장은 현재까지 모호한 상황
- 대만 통일 관련 중국의 강제적 수단 동원에 대한 전망
 - 근시일내 대만 통일 관련 중국의 정책적 행보나 대만에 대한 특별한 군사행동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
 - 중국정부는 현재 시진핑 제3기 정권 안정화, 코로나 대응 정책, 최근 중국 경제발전 둔화 등 중국 내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골몰
 - APEC, ASEAN 등 다양한 회의체를 통해 미·중간 의견교환을 위한 대화가 향후 일정시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지정토론 1 : Maria Adele Carrai (뉴욕주립대(상하이), 교수)

- 대만 통일을 위해 중국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수단(강제적 수단을 포함하여)은 무엇이며, 중국이 이러한 수단을 취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 질의
- 대만은 현재 반도체 등 미국의 전자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미국의 주변 지역 안정화를 위해 항해의 자유작전, 국제법에 기반한 규칙기반 질서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중국이 대만 통일을 위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이며, 이러한 수단(정책적, 강제적 수단 포함)을 시행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국의 대만통일을 위한 강제적 수단 동원에 대해 가지는 함의가 무엇인지 질의
- 향후 대만해협 등 대만 주변 해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 또는 작전이 이루어질 경우 우회할 수 있는 해상교통로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
-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대만해협을 포함한 주변 해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실시
- 대만해협에 대한 우회 항로가 실질적으로 활용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

○ 지정토론 2 : 정현욱 (KMI, 전문연구원)

- 시진핑은 대만문제 해결을 자신의 장기집권을 지지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무력을 통한 양안통일 가능성을 시사함
-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s)는 여전히 중국 정부가 표방하는 통일 방식이지만, 최근 시진핑 정부는 그보다 사회주의 제도와 민족적 과업 측면을 더욱 강조함
- 중국은 현재로서는 대만 흡수 또는 합병 방식을 통한 통일에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이 그러한 인식을 하는 데 큰 영향 미침
-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대만해협 위기가 고조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해운사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예의주시함
- 당시 해운사들은 미리 스케줄을 조정해 큰 손해를 입지 않았으며, 향후 유사시 대만 동부 해역으로 우회하는 항로를 선택할 것으로 조사됨

- 하지만 주목할 점은 최근 중국 해군의 활동 범위가 대만의 서쪽인 대만 해협을 넘어 대만 동쪽 해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임
- 김기주 박사께서 대만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한·미간 소통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한·중간에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자율성 혹은 통제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Yun Sun 연구원의 견해는 무엇인가?

○ 종합토론

- (김기주) 대만은 중국이 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관문
 - 중국 해양력의 태평양 진출을 위해 중국의 입장에서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지역
 - 대만해협 등 주변 해역 긴장고조시 대안 항로는 항상 존재
 - 중국이 민감한 대만문제에 대해 한국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원치 않으리라 추측함
 - 중국은 대만통일에 있어 외부 세력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원함
- (Yun Sun) 발표에서 언급한 대로 근시일내 대만통일을 위한 중국의 특별한 행동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
 - 다만, 장기적으로 대만 통일을 위해 중국 또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는 강제적 수단 또한 포함될 수 있음
 - 중국은 통일로 얻는 것뿐 아니라 잃는 것 또한 있으며, 통일 시도가 실패할 시 시진핑 정권이 입을 수 있는 타격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
 - 중국은 과거 북한의 남한 침범으로 중국의 대만 수복이 좌절되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도발로 인한 동아시아 불안 고조와 미국의 개입, 양안관계 악화 등 악순환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 할 것임
- (최원기) 중국의 대만 침공시 바이든 행정부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질의
- (Scott Snyder)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방국이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다는 함의를 가짐
 - 특히, 미국과 유럽의 경우 현재도 우크라이나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시 한국이 어떻게 대만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음

-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국의 대만침공에 대해 어떠한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함
- (김기주)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비전쟁물자를 지속적으로 지원
- (Yun Sun) 러시아 또한 일부 국가들과 전쟁 물자 등에 대해 협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협력 방안이 중국의 대만 침공 계획에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
- (김종덕) 전 세계 물류 공급망에 있어 대만해협의 가치를 고려할 때 양안 문제는 전 지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에너지 문제와 국제 식량 문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임
- 반면, 대만해협은 전 세계 절반 이상의 무역을 담당하는 아시아 경제의 핵심 해상교통로임
- 이에 대만해협의 긴장이 실질적 충돌로 이어질 경우, 전 세계 모든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부 국가의 생존과도 연계될 수 있음

□ 2세션 :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역할 (좌장 : Alex O'Neill, 하버드 벨퍼센터, Coordinator)

○ 발표 1 :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 한국의 전략정책 전망과 외교정책 방향
- 한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외교정책은 번영하는 자유-시장 경제, 활기찬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
- 현재의 국가이익, 정책 가치, 전략적 이익에 맞추어 한국의 외교정책 수정 필요
- 더 이상 주어지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규칙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한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질서 구축을 위해 한국의 더 큰 역할 강조
- 지역 및 국제사회에 있어 한국의 역할 강화와 이행 필요
-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 (비전) 자유, 평화,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 (목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규칙기반질서 강화

- (현 정부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의 3가지 중점 사항) - 자유(가치기반 외교 관계 추진), 평화(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에 반대, 지역 질서 구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전략/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협력), 번영(개방되고 공정한 지역 경제 질서 추구)
- (3가지 핵심원리) 포괄, 신뢰, 호혜
- 9가지 우선순위 정책 영역
- 규칙과 공유 규범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 구축, 인권과 법치의 증진, 핵무기 비확산 및 대테러 노력 강화, 포괄적 안보 협력 강화, 경제 안보망 확충, 과학기술 협력 촉진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관한 지역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 협력 파트너십 촉진, 상호이해와 교류 촉진
- 미·중 전략적 경쟁에 대한 한국의 인식
- (중국의 메시지) 한국이 중립을 고수할 것에 대한 전략 메시지 전달
- (한국의 외교 입장) 미·중간 양분화된 국제질서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 이익과 전략적 이익에 기초한 독립적 외교 정책 추구
- (상호 존중에 기반한 건설적 파트너십 목표) 중국과 정책이념, 가치, 전략적 이해가 다름을 인정하고, 중국을 배제하거나 적대시하지 않는 동시에, 상호 이익을 극대화
- 도전과제
- (북한 위협 관리 필요) 북한의 핵무기 시험과 미사일 위협 관리 필요
- (중국 리스크 관리 필요) 중국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미국의 대중 정책 참여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음
- (협력 관리 필요) 미국 및 같은 생각을 가진 우방국들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필요
- (인권 등 가치기반 정책 관리 필요) 중국의 신장 지구 및 홍콩의 인권 문제에 관한 한국의 접근법, 동남아시아에 대한 가치 기반 외교 추진 등과 관련한 도전과제 관리 필요

○ 발표 2 : Scott Snyder (미외교협회(CFR), Senior Fellow for Korea Studies and Director of the Program on US-Korea Policy)

-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 규칙 기반 질서 등을 지지하며, 이는 워싱턴의 전략적 방향과 일치함
 - 아세안정상회의와 유엔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은 워싱턴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을 정도로 미 동맹으로서 전략적 동일성 보임
 -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정책적 연결성도 많이 갖고 있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지지임
 - 두 정부의 차이는 문재인 정부는 지역의 중심성과 협력을 강조한 반면, 윤석열 정부는 미국-한국-일본 삼자관계의 전략적 동맹을 일종의 플랫폼으로 형성하려는 것임
-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자국 동맹으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측면, 즉 대중국 견제 정책과 관련해 미국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길 희망함
 - 중국은 여전히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으며 대만과도 공급망과 기술 부문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서 한국과 대만이 느낄 어려움 공감
 -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 미치는 시사점을 향후 예의주시할 필요 있음

○ 지정토론 1 : 민영훈 (KMI, 전문연구원)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 현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동인은 중국이 경제, 외교, 군사, 기술 등을 이용하여 역내에서 자국 이익을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행위임
 - 현재 미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적 달성을 위해 미국의 역량강화뿐만이 아닌 동맹국과 우방국의 집단적 역량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음
-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 한국 또한 최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ASEAN 지역의 지정학적,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
 - 특히,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

면서, 핵무기 확산 방지, 테러방지, 해양안보, 사이버 안보, 보건 안보 증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제시

－ 한국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차이

-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본적인 동인은 안보에 있어 북한의 적대적 행위로서 최근 지속하고 있는 핵무기 및 미사일 위협을 예로 들 수 있음
- 반면, 미국의 경우, 중국의 역내 강압적 세력 팽창이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의 주요 동인임
- 두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근본적인 동인에 차이가 있어, 향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이행할 때, 두 국가의 전략 이행에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됨
- 이에 대한 두 전문가의 의견을 물음

○ 지정토론 2 : John Park (하버드 벨퍼센터, 코리아 프로젝트 책임)

- －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 방향은 통합돼 있다고 보이는데 미국-일본 동맹과 미국-한국 동맹의 방향성은 다를 것임
-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성격이 미국-일본 동맹과 나는 차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음
- － 한국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공통된 인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음
- 윤석열 정부는 지금 한국이 중국을 위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결정하고, 중국에 대해 매우 현실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장관은 중국이 한국의 경제와 북핵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포지션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음
- 반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입장은 보다 명료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중국과의 마찰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임
- 윤석열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한다는 접근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음
- － Scott Snyder께서 중국의 경제책략(economic statecraft), 즉 경제적 강경책 또는 보복에 대해 언급했는데, 중국이 가할 수 있는 경제 보복에 대해 한국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지 궁금함

○ 종합토론

- (최원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적 사고에서 문재인 정부와 가장 구별되는 점은 지금은 한국을 스스로 개발도상국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이며, 다자관계가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임
- 윤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미국·일본과 다르게 추진하려고 하지만 윤 정부의 야심과 실행력 사이에는 격차가 큼
- 현재 한국 집권당이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윤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정책이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윤 정부는 다자관계와 양자관계의 중간 정도를 추구하고 있으며, 아세안과의 관계에서 일종의 이상주의적 발언(립서비스)으로써 아세안의 중심성을 이야기할 뿐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접근은 중요하다고 생각됨
- 한국은 ASEAN과의 관계에서 경제뿐 아니라 안보와 전략 분야까지 관여와 협력을 확대하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어려움과 도전요인이 많다고 인식함
- (Scott Snyder) 바이든 정부는 미국-한국-일본 삼자관계를 강조하며, 한국과의 관계와 일본과의 관계를 동시에 이끌어가고자 함
- 바이든 정부가 추진 중인 방법은 한일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각국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며, 이 틀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할 수 있다고 믿음
- 중국 정부가 자국에 대한 손해 없이 경제책략을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임

5. 성과

- 동아시아 및 한국에 중대한 함의가 있는 두 문제(대만해협 위기의 영향,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문제의 본질 파악
- 국제정치-안보 분야 세계적 싱크탱크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와 KMI의 협력관계 강화 및 신뢰구축 제고
- 한·미 전문가들의 학술적 교류협력 기회 제공, 사안에 대한 양국 전문가들의 이해 증진

6. 컨퍼런스 사진



<별표 2>

국외출장여비 정액표

□ 국외출장여비

단위 : US\$

직 급		등급	일비	식비	숙박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자동차 운임	항공 운임
원 장		가	50	160	실비 (상한액: 389)	실비	실비	실비	실비 (Business Class)
		나	50	117	실비 (상한액: 289)				
		다	50	87	실비 (상한액: 215)				
		라	50	73	실비 (상한액: 161)				
부원장		가	40	133	실비 (상한액: 282)	실비	실비	실비	실비 (Business Class)
		나	40	99	실비 (상한액: 207)				
		다	40	72	실비 (상한액: 162)				
		라	40	61	실비 (상한액: 108)				
선임연구위원으로 최상위부서장		가	35	107	실비 (상한액: 223)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8시간 이 상 (Business Class)
		나	35	78	실비 (상한액: 160)				
		다	35	58	실비 (상한액: 130)				
		라	35	49	실비 (상한액: 85)				
최상위부서장		가	35	107	실비 (상한액: 223)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35	78	실비 (상한액: 160)				
		다	35	58	실비 (상한액: 130)				
		라	35	49	실비 (상한액: 85)				
연구직	선임연구위원	가	35	107	실비 (상한액: 223)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35	78	실비 (상한액: 160)				
		다	35	58	실비 (상한액: 130)				
		라	35	49	실비 (상한액: 85)				
	연구위원	가	35	107	실비 (상한액: 223)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35	78	실비 (상한액: 160)				
		다	35	58	실비 (상한액: 130)				
		라	35	49	실비 (상한액: 85)				
	부연구위원	가	30	81	실비 (상한액: 176)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다							
		라							

직 급		등급	일비	식비	숙박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자동차 운임	항공 운임
		나	30	59	실비 (상한액: 137)				
		다	30	44	실비 (상한액: 106)				
		라	30	37	실비 (상한액: 81)				
	전문연구원 연구원	가	26	67	실비 (상한액: 155)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26	49	실비 (상한액: 123)				
		다	26	37	실비 (상한액: 90)				
		라	26	30	실비 (상한액: 77)				
행정직	책임행정원	가	35	107	실비 (상한액: 223)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35	78	실비 (상한액: 160)				
		다	35	58	실비 (상한액: 130)				
		라	35	49	실비 (상한액: 85)				
	선임행정원	가	30	81	실비 (상한액: 176)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30	59	실비 (상한액: 137)				
		다	30	44	실비 (상한액: 106)				
		라	30	37	실비 (상한액: 81)				
	전임행정원 행정원	가	26	67	실비 (상한액: 155)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26	49	실비 (상한액: 123)				
		다	26	37	실비 (상한액: 90)				
		라	26	30	실비 (상한액: 77)				

※ 최상위 부서장은 본부장, 부장, 감사실장을 의미

※ 직급별 자격기준

- 선임연구위원 : 박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선임연구위원인 자
- 연구위원 : 박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연구위원인 자
- 상기에 충족하지 못하는 선임연구위원은 연구위원으로, 연구위원은 부연구위원으로 기준 적용

※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구분 등급	대륙	국가 및 도시
가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도쿄, 홍콩, 싱가포르
	남·북아메리카주	뉴욕,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유럽주	런던, 모스크바, 파리, 제네바
	중동·아프리카주	-
나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스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출장 또는 체류예정지에서 상기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여행하는 경우 나 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